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수논단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강원대의 대응 / 이의한(강원대학교 부총장)



재학생 기고문

교육재정 : 학교회계제도 / 최정락(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특별대담

교육재정 중점연구소 선정의 의미와 계획 / 남수경(교육연구소 소장)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최현태(반디뿌리 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 연은영(작은도서관 숲으로 관장)

알쓸교원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 공정성



What a Wonderful World 세계의 교육이야기

[미국] 초중등학교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과 재정지원



교육연구소 행사

2021년 제4차 교육연구소 콜로키엄(역사교육과 김도민 교수)

2021년 제5차 교육연구소 콜로키엄(과학교육학부 이화용 교수)





위기를 기회로 삼기위한 강원대의 대응

이의한 (강원대학교 부총장)



최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더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학생 충원의 위기를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위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한 발짝 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국공립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며 혁신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BK21 사업에서 7개의 연구단과 11개의 연구팀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원금 4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대가 어떠한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강원대가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4년간 교육과 연구에 새 지평을 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선정 등 수많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학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올랐고, 최근에는 THE, QS, US뉴스앤월드리포트 등 권위 있는 세계 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세계 900위권, 국내 20위권에 랭크되어 글로벌 경쟁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20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2. 강원대는 대학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의 교육,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지-학(地-學) 협력’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는 강원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국공립대 최초로 선정된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역의 교육,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지-학(地-學) 협력’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300여 개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는 춘천캠퍼스 동문 일대에는 미래도서관, 평생교육원, 백령스포츠센터, 반려동물 종합의료센터를 건립해 시민 친화형 플랫폼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3. 강원대는 춘천, 삼척, 도계 3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각각 다른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원대에는 3개의 캠퍼스, 18개 단과대학, 10개 대학원이 있으며, 2만2000여명 재학생과 1700여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춘천캠퍼스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기술 분야부터 인문·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고밀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삼척캠퍼스는 미래 수소산업과 청정에너지, 방재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교육혁신과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해 동해안 지역의 산불,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계캠퍼스는 보건과학계열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고 ‘배리어 프리^{*} 도시’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arrier-Free; 고령자나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사회 운동)

4. 취업난과 경제 양극화 등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청년들의 자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공개 채용에서 직무 중심 수시채용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했고, ‘KNU 직무박람회’를 통해 동문 선배의 생생한 취업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KNU 굿 잡(Good Job) 50 캠페인’을 전개해 교수와 직원,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발 벗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졸업생 총 38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AI 자기소개서 작성 플랫폼을 구축해 직무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 및 스터디, 리더십 취업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저출산에 따른 대학 소멸 위기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 할까요?

“대학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기초 학문 보호 및 학문의 다양성 유지, 지역의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의 거점,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및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은 교육연구중심 대학, 지역대학은 특성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대학으로 차별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도권 대학은 석학 양성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6. 강원대는 다른 어느 지역의 대학보다 지역경제, 인재 육성 등에 기여하는 비중이 큼니다. 지역과 상생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산업과 문화의 허브가 되는 것을 강원대의 역할로 봅니다. 이른바 ‘오픈 캠퍼스’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연구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포함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강원도, 육군 2군단과 함께 운영하는 ‘강원열린군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인데, 최근 주목받는 AI, 드론,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분야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인제·양구·화천군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대와 이들 3개 지자체가 지역대학(강릉원주대·경동대·연세대 미래캠퍼스·한림대)과 함께 온·오프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7.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융복합, 기술혁명 등 급변의 시기에 대학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강원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공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수나 수업시간에 구애하지 않는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의 전공과정도 4년제 과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학문 간 경계를 허문 유연한 학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대학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예산과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규제를 풀어 창의력을 북돋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원대는 올해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인이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12~18학점)을 단기간에 이수하면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일반인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교내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전환 교육모델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처음 설치된 ‘미래융합가상학과’는 해마다 새로운 분야의 융합전공을 확대해 지금은 17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학교회계제도



최정락(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교육재정과 학교회계란?

교육재정[教育財政, educational finance]: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 차원의 교육부 예산,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비특별회계, 단위학교의 학교회계 등 다양한 갈래가 있다. 그중에서 학교회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학교회계제도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09호, 2000. 1. 28.,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2001. 3. 1.부터 전국의 학교에 시행되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모든 수입과 세출의 일원화하고 교직원의 참여, 학생·학부모 등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교회계의 장·단점

학교회계제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해진다. 둘째,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의 예산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회계관련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활동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문제점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소수의 행정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예산에 대하여 비전문가이다. 이렇다 보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닌, 어렵고 귀찮은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심 부재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서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 특정 사업에 예산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학교의 예산 및 결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을 예산·회계에 대한 전문가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의결이 아닌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등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학교회계개선방안

위의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정직원 뿐만 아니라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를 위해 각종 연수 및 프로그램에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인 예산 수렴 및 요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학교참여예산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교내방송, 담임선생님을 통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소요예산 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예산 요구서에 반영한다.

단위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아울러 예산 편성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회계 예산집행 효율성·형평성을 확보하며 학교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 별 대 담

교육재정 중점연구소 선정의 의미와 계획



남수경 (교육연구소 소장)

Q

우선 교육재정 중점연구소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도자료가 이미 나가긴 했으나, 이번에 선정된 교육부, 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무엇이고, 특히 교육재정 중점연구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별 연구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중점연구소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는 국내 연구거점기관으로서 중점연구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사회 전체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는 "교육재정"분야의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6년간 약 1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육에 대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Q

이 사업의 핵심 과제는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한 정책적, 국가적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학교급별로 교육재정 현안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유·초·중등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은 현재 상반된 상황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유·초·중등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 범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교육계와 재정당국(기획재정부)간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세출액은 약 82조 2,266억원인데,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규정하고 있고, '16년부터 경기 호전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즉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해도 재원은 안정적·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제도적 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단순히 학령인구의 수로만 대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코로나이후 교육시설의 첨단화, 학생 맞춤형 미래학교 재구조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학교공간 및 교원정책의 개혁 등을 포함할 경우 계속해서 막대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재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

다음으로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최소한의 대학교육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세입구조를 보면, 총 세입액의 절반이상인 약 53.4%가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수입'입니다. 그런데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등록금인상 억제정책이 기조를 이루면서 대학들은 2021년 현재 10년간 등록금은 동결한 반면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정원은 거듭 줄여 왔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구조개혁, 특히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은 자율성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도 없다는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초·중등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은 상반된 상황에 처해 있고, 교육재정 중점연구소에서는 당장 이들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중점연구소로서 1차년도 핵심 연구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주요 투자수요 전망」과 「법정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입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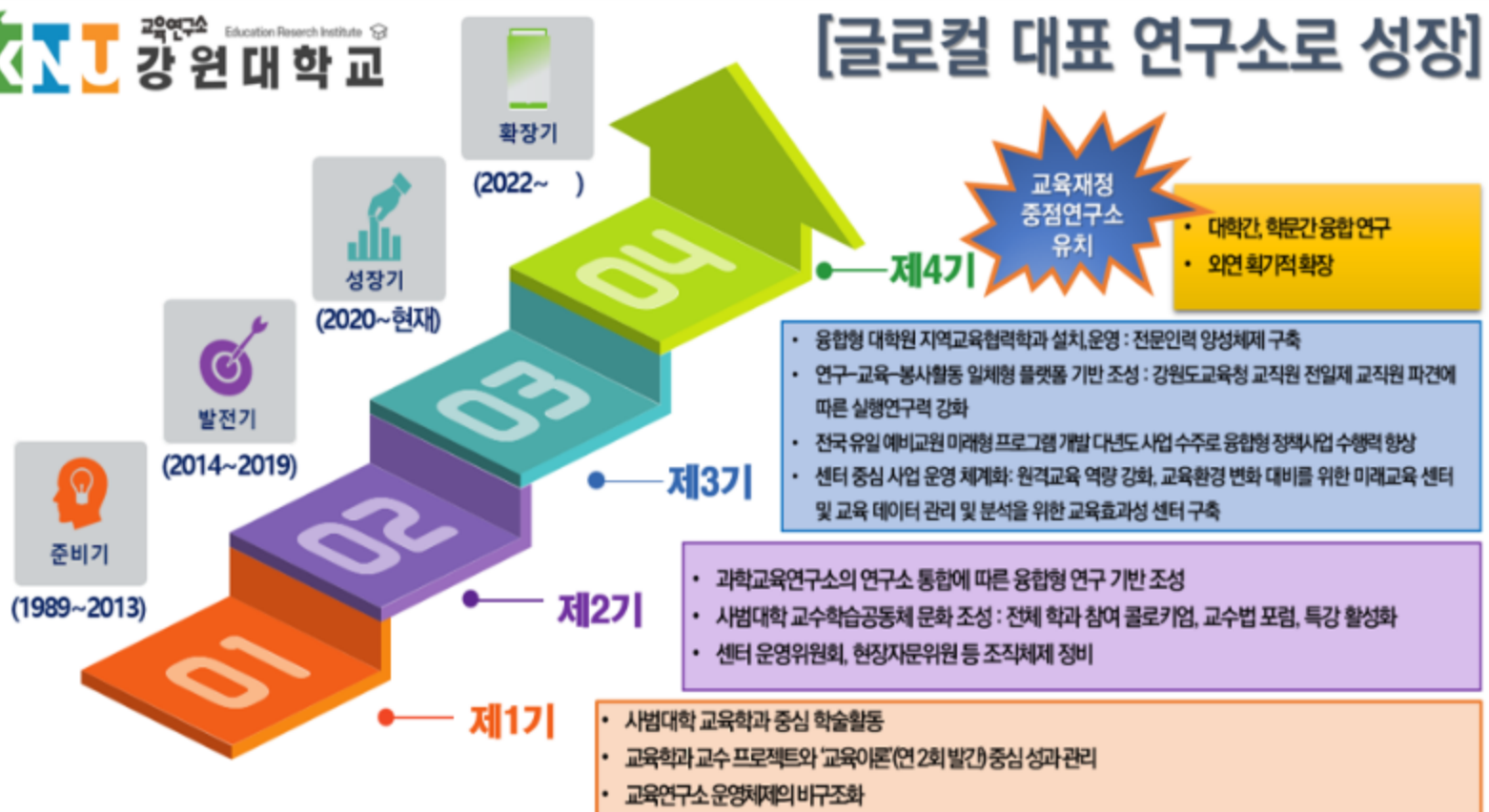
6년이라는 어쩌면 긴 기간 동안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그럼, 소장님,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조직과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중점연구소 선정이 가져올 연구소의 변화와 발전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A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는 1989년 설립된 이후 2014년 과학교육연구소와의 통합, 2017년과 2018년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 운영, 2020년 융합형 대학원인 지역교육협력학과 설치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KNT 교육연구소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강원대학교

[글로벌 대표 연구소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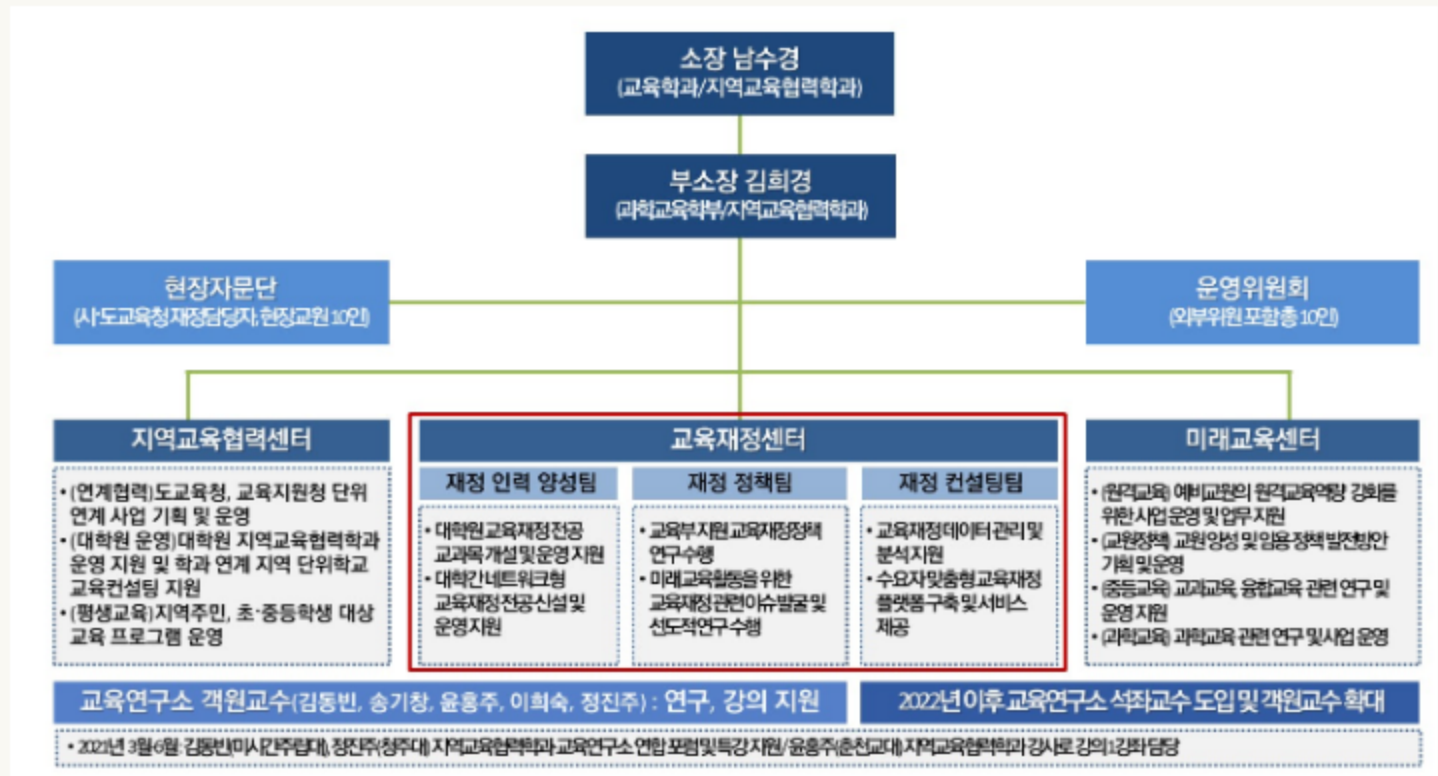


[교육연구소 변천과 전망]

2021년 9월 26일 현재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는 6개 센터(지역교육협력센터, 미래교육센터, 중등교육정책센터, 교원정책센터, 교육효과성센터, 과학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전문화와 특성화를 기반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A

교육재정 중점연구소 선정 이후에는 "지역교육협력센터, 미래교육센터, 교육재정센터"로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2021. 10. 1. 운영위원회 조직 개편안 심의 예정). 향후 "교육재정센터"를 신설하여 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와 운영(지역교육협력센터)과 미래형 중등교육 개혁 플랫폼 사업(미래교육센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재정센터"에서는 교육재정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교육재정 구조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교육재정 관련 신진인력을 양성하는 팀을 구성하여 각 센터 간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재정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중점연구소 선정 이후 조직 재구조화]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구성과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기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과 강원 지역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계획이나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2021년 9월 현재 강원대학교에는 인문사회분야의 중점연구소가 총 2개('교육연구소'와 '강원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점국립대학교로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중점연구소 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문화연구소는 이미 이름에서 강원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것이 중점사업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소'는 "국가 교육재정중점연구소"로서 연구범위도 방대하고 연구과제 역시 국가 단위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주제 자체보다는 국가단위 교육재정 아젠다를 발굴하고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라는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 대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에 '교육재정전공'을 신설하여 장차 교육재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할 계획입니다. 교내 타 단과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교외 타 대학의 교수들도 객원교수로서 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융합형 교육재정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대학교가 명실상부한 교육재정 연구 및 인력 양성의 메카로서 교육재정 분야의 선도대학이 되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를 각각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장(場, field)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대학교의 대학원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구력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강원대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01

최현태

반디뿌리 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02

연은영

작은도서관 숲으로
관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공정성(Fairness)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달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윌리엄 데이먼(William Damon)은 젊은 시절의 연구(1975, 1977, 1980)에서 자원을 나누고 할당해주는 4세~8세의 아동의 사회적 추론을 다음과 같은 발달단계로 제시한다.

0-A	정당화와는 거리가 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근거로 선택(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 꺼)
0-B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근거로 선택하지만,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외적인 기준(크기, 성별, 외형 등)으로 정당화하며 선택(나는 여자니까 내가 더 많이)
1-A	개인의 다양성과 주관적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 평등에 기초를 두고 결정(모두 똑같이 나눠)
1-B	행동의 호혜성에 입각해서 결정,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업적과 응보의 개념이 출현
2-A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도덕적 상대성을 인식하며 가난한 사람과 같이 특별한 필요와 양적인 절충의 가능성을 인정
2-B	도덕적 선택이 확고하고 명확하지만, 정당화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람의 요구를 고려하며, 평등과 호혜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사고

* 출처: Damon, 1980: 1011

모든 발달이론이 그렇겠지만, 이 단계들을 엄격하고 정형화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추론들이 여덟 살 무렵이면 열추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심지어 20개월 영아들도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cf. Sloane Bailargeon & Premack, 2012). 그만큼 공정성은 아주 일찍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개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의 개념이 쉽고 명확한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다. “보도의 공정성”과 같이 중립성이나 비편파성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공정한 거래”와 같이 독점이나 담합에 의한 시장지배, 또는 상식을 벗어나는 계약 등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주고받는 호혜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의 장면에서는 “입시제도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 “선발의 공정성”과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는 한정된 교육기회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주로 공정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 또는 그런 배분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 그리고 그런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나 주관자가 고수해야 할 원칙을 가리키기도 한다.

공정성이 언급되는 맥락이 다양한데도, 공정성의 개념은 대체로 "부당한 ~", "불공정한 ~"과 같이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이를 회복하려고 권리를 주장하거나 교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등장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이 받는 특권이나 수혜,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납득하기 어려운 편견이나 관행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강요되는 의무 등등... 부당성, 불공정성에 대한 항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체구나 허기나 기호와 관계없이 같은 식사를 같은 양으로 배급해야 한다면,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에도 부정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평등을 취급하는 실제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든, 천재적 재능을 가진 아이든, 모든 아동들은 아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이 취급받아야 한다. "범주내 평등"에 의하면 결국 규칙은 규칙이며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터스의 말대로 인격 존중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리에는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도 특별한 경우를 일일이 고려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취급되기를 요구할 수 없다." (Peters, 이홍우·조영태 역, 2003: 146). 오히려 정당화가 필요한 것은 "범주간 평등"이다. 사람들을 상이한 범주에 배치할 때, 즉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할 때에는 이러한 차별대우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유명한 존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함께, 사람들을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차등의 원칙"을, 새로운 민주주의적 평등주의(Rawls, 황경식 역, 1977: 95)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전적 자연법이론과 사회계약론의 취지로 되돌아가서, 도덕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놓고 사고실험을 한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Hobbes, <리바이어던>, Ch. 13), 로크의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그림 1] 존 롤스(J. Rawls)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Locke, <통치론-속편>, 4절)로서 그려진 '자연상태'(natural state)는, 원시림에서 발견되는 미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상가가 사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정치권력, 사유재산의 보호)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설적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루소가 무너뜨린 것처럼, 인류는 어떤 필요,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사회라는 도구를 성립시키는 사회계약에 합의했던 것이 아니다. 사회는 우연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사회계약은 늘 새롭게 정당하게 다시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 롤스는 이렇게 새롭게 쓰여지는 계약이 (정당한 이유없는) 임의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원칙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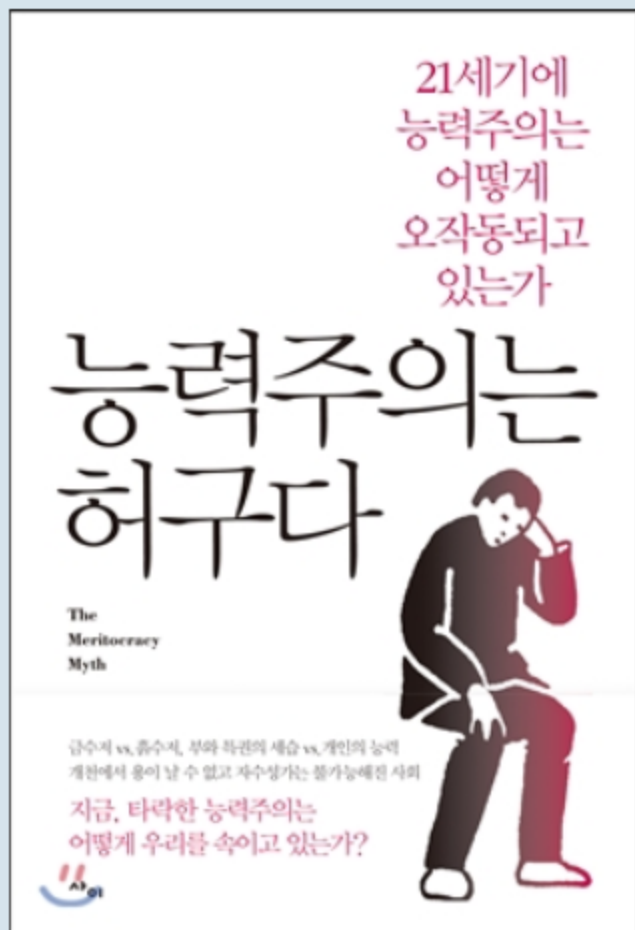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끔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있다고 가정한다."

(Rawls, 황경식 역, 1977: 155).

예컨대 카스트제도 같은 신분제도는 특정 가문에서의 출생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소득, 재산, 사회적 지위의 배분에 쓰이는 것이다. 봉건제도가 무너진 후 대다수의 사회에서 자본을 인정하고 자유시장을 옹호하지만, 모든 자원을 자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배분하지 않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모의 자산에 힘입은 사람들의 승승장구를 부당하게 느끼는 것이다.

심지어 샌델의 평가에 의하면(Sandel, 이창신 역, 2010: 214-31),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만으로도 사회적 우연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재능의 도덕적 임의성에 관한 롤스의 주장이 맞다면 그 주장은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p.223). 롤스가 보기에 재능과 심지어 노력까지도 사회적 우연의 요소이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 사람들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 하는 데 합의한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Rawls, 황경식 역, 1977: 121-2). 즉 재능있는 사람을 격려해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이익은 "사회에 불리한 자의 복지에 대해 기여하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업적주의(meritocracy)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포상을 받을 만한 자격(재능과 업적)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증진하도록 만들어진 기본 구조" 안에서 의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더 나은 대접(입학기회의 제공, 더 나은 임금, 그리고 권력 등)을 받는 것이다.

공정성을 도덕적 자격의 문제에서 분리하는 롤스, 그리고 롤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선의 관점에서 분배 정의를 이야기하는 샌델의 입장은, 오늘날 능력주의를 하나의 신념처럼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롤스의 논의는 공정성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생학적 조치가 그려지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선천적인 요소에 의한 차이를 무효화할 방안은 없다. 선천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들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남아있는 한, 그 차이가 계기가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대우가 있기 마련이다. 남녀의 구분이 그럴 수 있고, 기호와 재능과 적성이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어떤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환경에서 자라는가 하는 환경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가 정당한 것이 되도록,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우리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공정성은 이러한 실제적, 실천적 사고를 이끄는 개념이다.



[그림 2] 스티븐. 맥나미(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그림 3] 박원익. 조윤호(2019). 공정하지 않다

[참고문헌]

- Damon, W.(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 1010-1017.
- Peters, R. S. 이홍우 역(2003). 윤리학과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Rawls, J. 황경식 역(1977).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 Sandel, M.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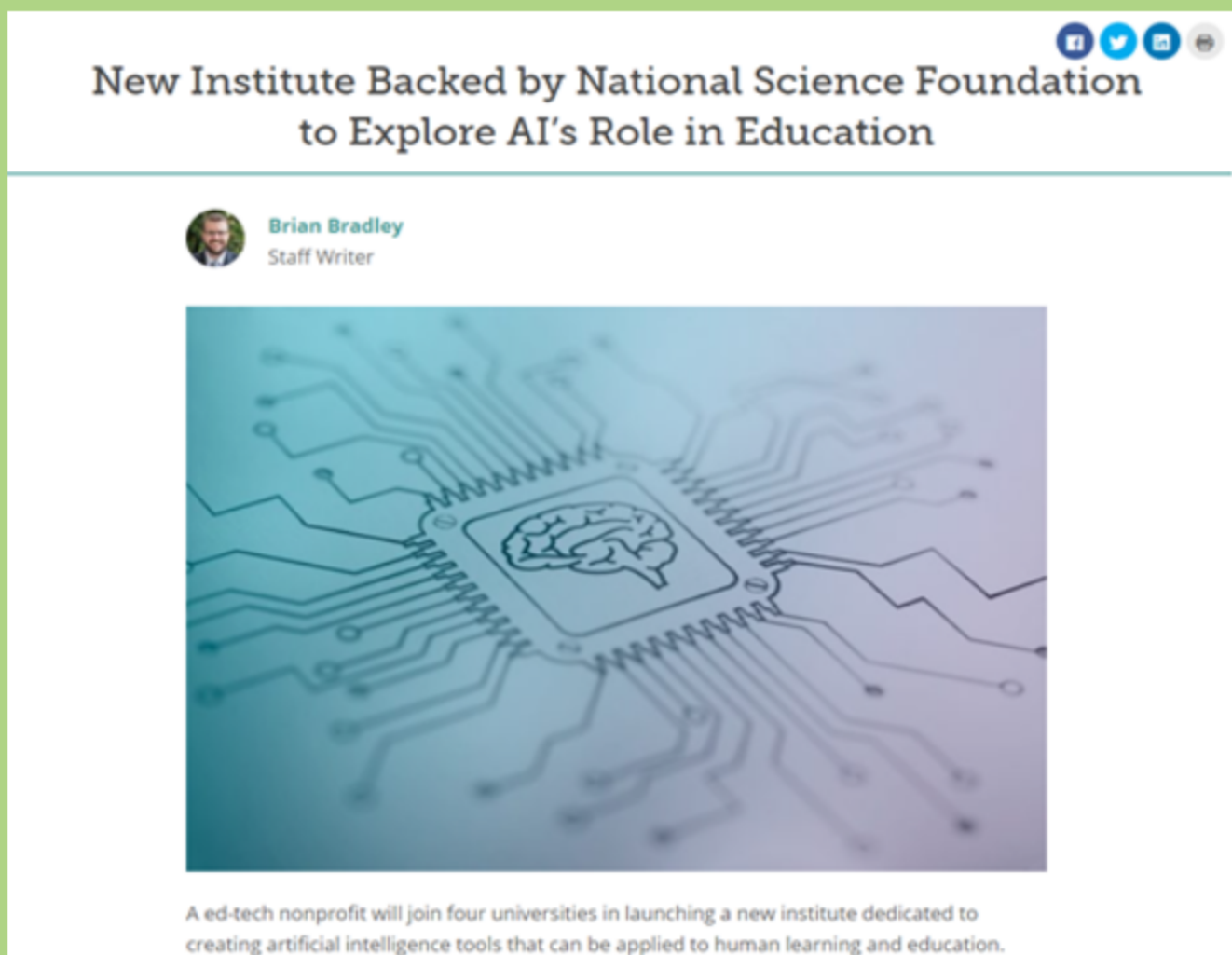
[미국] 초중등학교를 위한

인공지능(AI)연구소 설립과 재정지원



김지원(강원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교수)

○ 에듀테크 비영리 단체 디지털 프로미스와 4개 대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Vanderbilt University)이 공동으로 '참여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소(AI Institute for Engaged Learning)' 설립을 추진하며,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앞으로 5년간 2천만 달러(한화 약 231억 5,000만원)를 이 연구소에 지원할 예정임.



○ 연구소 설립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AI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교사의 AI기술 활용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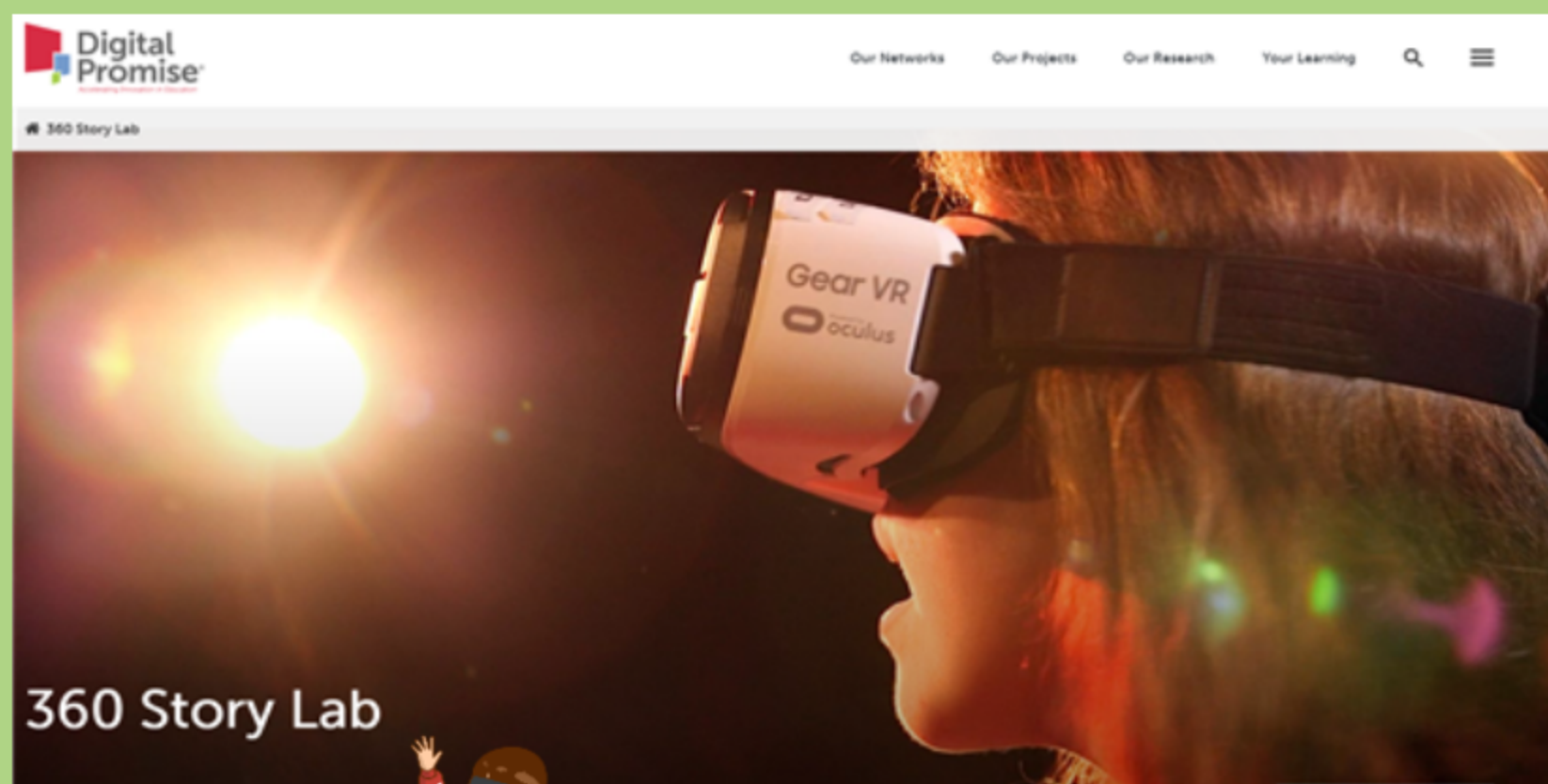
○ 특히 '교실 오케스트레이션(classroom orchestration)'전략에 초점을 두고 교사가 장기적, 복합적, 협력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소 설립 목표

- 1) 스토리 기반의 문제 시나리오 통합: 의사소통, 협동작업, 창의성 촉진
- 2) AI 캐릭터 개발: 말, 표정, 몸짓, 시선, 자세를 활용하여 학생과 소통
- 3) 교육과정 맞춤형 톨 구축: 학생의 상호작용시 나타나는 대화양상, 시선, 표정, 몸짓, 자세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지원

○ 또한, 도구개발 이후 윤리적 설계를 검토하고 도구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박물관 및 외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참조]


<https://marketbrief.edweek.org/marketplace-k-12/new-institute-backed-national-science-foundation-explore-ais-role-education/>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비영리단체 Digital Promise <https://digitalpromise.org/>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9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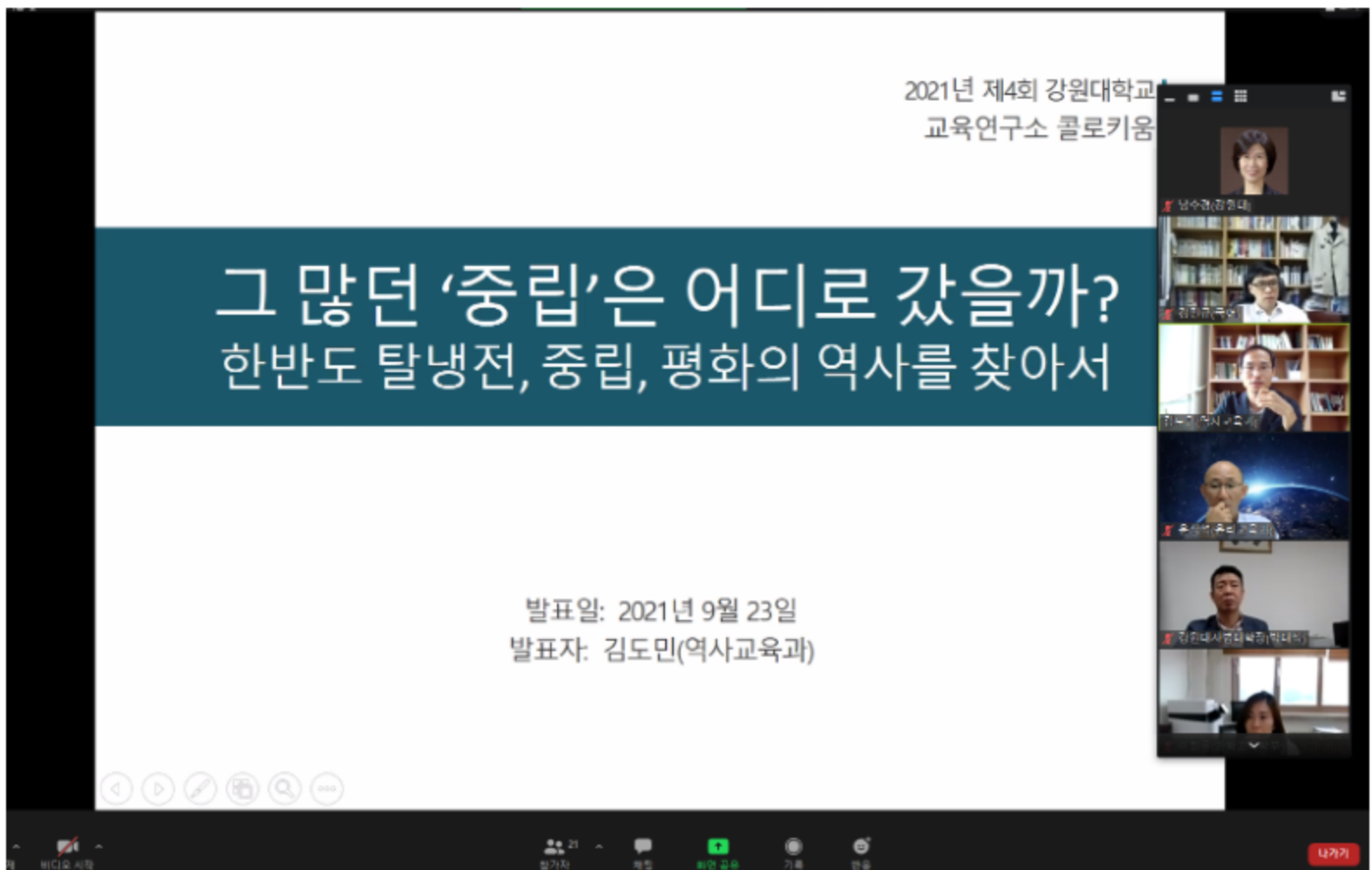
2021 제4차 교육연구소 콜로키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3일(목) 11시 50분-13시 20분

장소 비대면(Zoom 기반 화상회의) 

주제 그 많던 '중립'은 어디로 갔을까?: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사 김도민(역사교육과 교수)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9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2021 제4차 교육연구소 콜로키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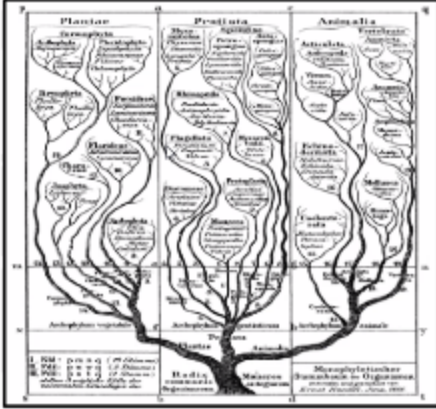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11시 50분-13시 20분

장소 비대면(Zoom 기반 화상회의) 

주제 줄기세포: 과거-현재-미래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다크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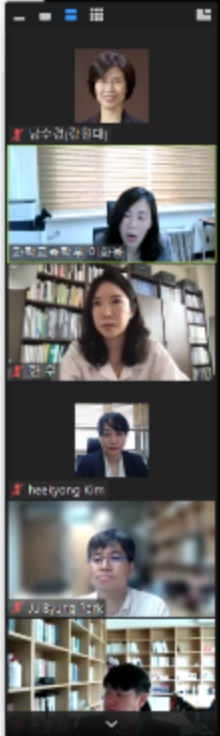
연사 이화용(과학교육학부 교수)

Origin of the term “stem cells”

Ernst Haeckel

“Stammbaum” (German for family trees or “stem trees”). In this context, Haeckel used the term “Stammzelle” (German for stem cell) to describe the ancestor unicellular organism from which he presumed all multicellular organisms evolved



화상회의
비디오 시청
음성
채팅
화상회의
기록
만들기
나가기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향상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강원도 내 현장
교사와 사범대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사범대생의 원격
교육 전문성 강화

주기적
학습지도로
학업 태도 개선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생에게 지역사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및
국립대 공공성 확보

2021 Teach for Gangwon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신청 상황에 따라
멘토와 멘티 1:1 또는 1:3 수준
소수 정예 맞춤형 원격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참여자 연중 상시 모집 중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담당 교사가 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학교의 소재지,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함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

* 코로나19나 강원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중등교육센터(033-250-7256)